

국립공원 입장료 없앤다

우리당, 산·사찰 등 하반기 일괄폐지 추진

열린우리당이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16일 “산, 사찰 등을 국민들의 것인네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 와왔다”면서 이 같은 입장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지역과 사찰 여부에 따라 1천~3천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4인 가족이 방문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괄 폐지하거나 대폭 할인하는 방안을 협의, 이를 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사회복지포럼 회장인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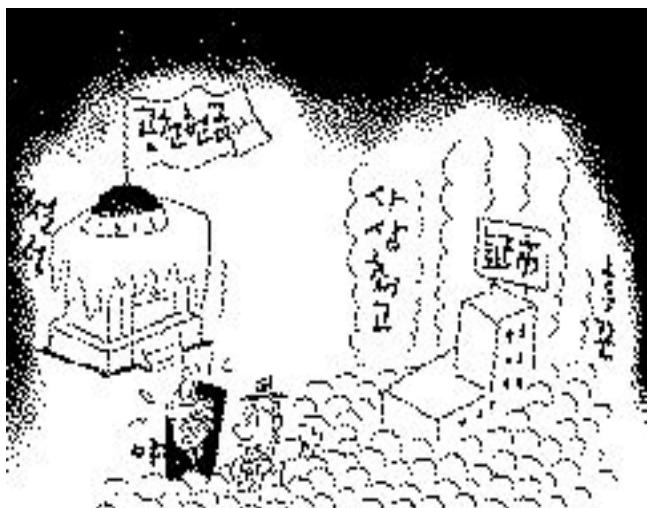
리당 장복심 의원도 최근 국회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4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주 5 일제 근무와 월평수요에 부응해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입장료를 폐지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등 일부 정부부처는 국립공원 관리 및 사찰 관리비가 연간 300억원 가량 소요되는 데다, ‘수의자 부담 원칙’을 들어 입장료 폐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당정간 조율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만평

- 김종두



현금할 돈이 죄다 몰렸나 보죠?!

**光州日報
광고집수안내**

• 광주광역시 107-225403
• 전화: 062-227-9600 · FAX: 227-9500

사람 찾을

김 병 철
 • 키: 158cm
 • 인격력과 도학
 • 전남 협광
 • 551202-1659211
 • HP: 010-4289-3288
 • 신고: 112
 현상수배 300萬

대위변제금 지급기관 변경공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광신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대위변제금 지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래 -

1. 대위변제금 지급기관
 변경 전: 송정신입신용협동조합
 변경 후: 어룡신용협동조합

2. 대상 조합원 등
 광신신용협동조합 등 중 송정신입신협으로부터 대위변제금을 미수령한 자

3. 지급기간
 2006. 4. 17 ~ 2009. 8. 10
 2006년 4월 17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분양대행 전문회사

(주) 청담 D & C

Tel. 062-382-4984 / Fax. 062-384-0049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앞 (교: 남정부)

● 분양대행 전문
 ● 아파트/상가/점원주택
 ● 기타 부동산 관련
 ● 부동산 개발, 관리
 ● 부동산 투자클럽
 ● 광주, 전남공인중개사 협력체 구성

(주) 청담 D & C

사원 모집

54년 전통의 호남대표신문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불편부당의 정론을 추구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십시오.

모집 대상

모집부문	인원	용 시 차 력
고등군, 나주군 임금군 주제기자	0명	- 일간신문경력 1년 이상인 자 - 당시 인사제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필기시험(국어, 삼식, 논문)
- 3차: 면접

제출 서류

- 이력서(시진부작, 연락처 명기) 1부
- 자기소개서(A4 1면 분량)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2006년 4월 21일까지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총무국(☎ 082-220-0514)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光州日報社

‘출총제’ 이르면 내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공정위 ‘시장경제 선진화 TF’ 구성

7월부터 대기업집단 정책 대안 논의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폐지 시기는 2007년 또는 2008년이 논의되고 있으며 출총제 폐지로 우려되는 소수주주의 권리 침해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현대수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 출총제 관련 부처의 장관들은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경부는 2007년에, 공정위는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출총제 폐지 여부를 포함해 대기업집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시장경제 선진화 테스크포스(TF)’는 출총제 폐지 시기와 출총제를 대신할 제도를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출총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내놨는데 출총제를 대신할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세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총제와 비슷한 ‘대규모 회사의 주식 보유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2002년 11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공정위는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제3자를 총망라한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구성, 오는 7월부터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두산,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14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어났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美 ‘反이민법’ 반대 시위
 불법 체류자들을 범죄자로 저별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반 이민법 HR4437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태극기가 포함된 대형 만국기를 들고 지난 15일 로스엔젤레스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수로탐사 강행시 법에 따라 엄중대처”

오늘 장관급 대책회의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 측 배터적경제수역(EZ)에서 수로를 측량한다는 일본의 계획과 관련, 17일 오전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EEZ 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공천비리 의혹 5~6건

한나라당, 추가 발표

한나라당은 16일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과 관련한 내사 결과를 이번 주 초에 추가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클럽 공천감찰단 관계자는 이날 “5~6건의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한 내사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며 “화요일(18일) 이전에 해야되거나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은 최근 5~6건의 공천비리 의혹을 내사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해 불필요한 의혹을 털어버리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감찰단에 제보된 비리의혹 중에서는 원외 인사들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이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종합병원 적합부지 매매

- 상무지구 C1, 상업용지 -

- 위치: 상무병원건너편, 이연안과 옆
- 대지면적: 약 870평
- 평당매매가: 1,000만원
- 주차복합건물도 가능(오피스텔)
- 장점: ① 광로변 최고의 광고효과
 ② 상무병원, 롯데마트건너 최고의 상권
 ③ 최고의 교통접근성

연락처: 062-681-5665 H.P 011-601-5354

▲ 광주광역시 광복군 대전길 100 대지 1000평

▲ 광주광역시 광복군 대지 1000평